

선거구 획정 작업 속도전... '뇌관' 곳곳 산재

여야, 지역·비례 의원 비율 못정해 '논란의 불씨' 남겨

선거구 통·폐합도 정당·주민 이해관계 치열한 공방 예상

여야가 지난 18일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담보상태였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런 내용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일 선거법심사소위에서 의결,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획정기준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에 '공'을 넘겨 선거구 획정 작업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획정위 내부에서 '여야의 대리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획정위가 안을 마련해 법정기한인 오는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는 다시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개혁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줄 획정기준은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행법에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

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자치시·군·구 분할금지 원칙'과 관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별도의 선거구로 존재하고 있지만 인구격차를 2대1로 조정할 경우 인구가 하한선을 밑돌아 조정이 불가피한 광주 동구와 부산 영도구 등의 지역을 염두에 둔 기준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현재가 제시한 2대 1의 상한(27만8000여명)·하한(13만9000여명) 인구비율을 적용할 때 조

정이 불가피한 선거구는 60개나 된다. 이 가운데 상한 인구를 초과한 선거구는 36개, 하한 인구에 미달해 인근 지역구에 통·폐합돼야 하는 선거구는 고흥·보성, 무안·신안, 장흥·영암·강진 등 2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구 통·폐합의 경우 정당 및 정치인은 물론 지역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돼 획정위 내부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통·폐합대상인 지역구는 대부분 농촌지역이어서 균형발전이 어려운 획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획정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도 획정 작업의 어려움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는 자체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도출한 뒤 선거구를 확정하거나, 비례대표 의원수는 접어둔 채 지역 선거구 획정작업에 나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획정위마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격론이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수를 일단 정할 경우 최소한 현재 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서 거기에 맞춰 지역구 수를 정하는 만큼 통폐합 지역구 의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반면에 획정위가 후자를 택해 선거구 획정작업을 할 경우에는 현행 '지역구 246개'를 최대한 유지하거나 늘리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 청문회' 명문화... 국회법개정안 쟁점 부상

여야간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를 명문화 한 '국회법 개정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4년 11월2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미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현행도 관례적으로 개최하는 청문회를 굳이 명문화 할 경우 잦은 청문회 개최로 의사일정 마비가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형 비리과 같이 수사 당국이 밝히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상임위 차원의 '약식 국정조사'가 명문화되는 효력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 소관인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졌던 극한 대치 상황이 다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정보원의 민간인 해직 의혹 사건이 '1호 상임위 청문회' 대상으로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부터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수정하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의사일정 합의도 불발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수정안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관바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안을 먼저 처리해 가결될 경우 관련 내용을 본안에 반영하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억대 금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지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與, 오픈프라이머리 친박-비박 또 신경전

이정현 "역선택 문제점 우려"

정병국 "계파간 세대결 걱정"

여야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총선연석회의에서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을 할 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역선택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경선 참여율이 낮고, 상대방이 토폴 뭉쳐 지지자가 역선택하면 큰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쪽에만 국고보조금이 100억원 이상 지원되면 형평성 문제를 상대정당이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계파 간 싸움이 아니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통령 정부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친박계에서는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공천 해산이 안 되고 현역 의원 대부분이 또다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이(친 이명박)계 출신인 정병국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계파간 세 대결이 벌어지고 공천학살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모두 동의한 제도를 현실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누가 봐도 정치개혁의 요체라 할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번 국회를 통해 꼭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가라운지

장병완 "빅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침해 방지 기준 마련을"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 방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은 "방통위가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 하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해당 조항을 보면 비식별화 개념이 완전치 않아 언제든지 재식별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도 방통위는 이를 역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나선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제적으로 프 로파일링 금지 및 설계 시 프라이버스 고려 규정 등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식별 정보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거나 강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순 "시판중인 수도꼭지 6개 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환경부가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수도꼭지 시판품의 위생안전 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의 시판

품 중 6개 제품에서 최대 4.2배에 이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은커녕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인증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시판품의 인증을 받았지만 시판품 조사는 겨우 2.3%인 38개 제품을 처음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다 큰 문제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초과된 제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제품의 리콜조치를 할 수 없고, 제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